
이슈브리프

2017. 8. 21

I. 문재인 정부의 통신료 인하의 문제점과 대안 / 1

II. 차기 지방선거와 문재인 정부의 ‘도시재생 뉴딜사업’ / 5

<이슈브리프>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,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·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I. 문재인 정부 통신료 인하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

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통신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,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판매 대리점 같은 골목 상권피해, 알뜰폰 시장의 고사 등 문제점이 드러나. 국회내 ‘與野政·업계·전문가·시민단체 통신비인하 협의체’ 구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1. 통신료 인하 정책 추진 현황

○ 문재인 후보 공약으로 가계통신비 절감 7대 정책 발표

- ▲통신기본료 폐지(월 11,000원) ▲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
▲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 실시 ▲기업의 통신비 인하 유도 ▲편리한 데이터 이용환경 조성 ▲프리와이파이 대한민국 건설 ▲한중일 로밍요금 폐지

○ 국정자문위원회 ‘통신비 절감 대책’ 발표

- 어르신, 저소득층 기본료 폐지 수준 감면 혜택 제공
- 보편 요금제 도입 등

※ 기존 3만원대 요금 제공 수준의 음성·데이터(200분, 1GB)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가입하면 월 11,000원 이상 절감

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료 인하

- 선택약정할인율 20% → 25%로 강행 예정

2. 통신료 인하 관련 업계 의견

○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(대리점주 모임), 기본료 폐지 시 골목상권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

- 기본료가 폐지되면 이통사 매출이 연간 7조 2천억 원 가량 감소되며, 이로 인한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전국 3만 500개 휴대폰 매장이 절반으로 줄어 약 4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상
- 또한, 통신사는 휴대폰 구입 시 지원되는 공시지원금을 줄일 것이고, 멤버십(극장, 커피숍 등에서 할인 혜택) 역시 축소되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며, 유통망 판매 장려금 역시 감축될 것이라고 주장

※ 공시지원금이란?

- 휴대폰 구입 시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. 예를 들어, 6만 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29만원 제공되던 공시지원금을 60만 9천원으로 올리면 소비자는 출고가 69만 9,600원 짜리 휴대폰을 9만원에 구입할 수 있음

※ 유통망 판매 장려금이란?

- 이통사가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타 통신사를 자신의 통신사로 전환시키는 경우 당해 대리점에 제공하는 인센티브

○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알뜰폰 고사 가능성을 걱정

- 현재 34개 사업자(가입자 수 약 700만 명)가 있으나 기본료가 폐지 되면 알뜰폰은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려 기존의 가입자가 통신 3사로 다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입장

3.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의 문제점

○ 反시장적 정책

- 가스, 수도 등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에서, 정부가 인위적 개입으로 요금 인하를 강제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음

○ 文 대통령 공약 이행의 무리한 추진

- 선택약정요율 상향등에 대해 통신사는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며 알뜰폰 시장, 휴대폰 매장 고사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

4. 대응 방안

○ ‘통신료 인하 VS 통신료 인하 반대’ 프레임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

- 現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통신료를 강제 인하하겠다는 방침
-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통신료 인하 반대 시, 국민의 통신비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통신사업자의 편에 선다는 여론 반응이 부담

○ 국회 內, ‘與·野·정부·업계·시민단체 등 통신 요금인하 협의체’ 구성

- 국회 內, 단순히 요금인하 뿐만 아니라 4차산업의 발전 효과까지 고려하여 요금인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

○ 정보통신기금(방송통신발전기금, 정보통신진흥기금)을 실질적으로 통신이용자 권익을 위해 사용해야함

- 이통사의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등을 주 재원으로 하는 정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한 해 약 1조4,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통신이용자 권익을 위해 쓰이는 비용은 약 2,400 억원으로 17%에 불과함

- 이통사가 내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등은 모두 국민의 통신비 원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대로 통신 취약계층 지원, 통신 인프라 확충, 4차산업 대비 등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확대 해야 함

[작성: 나경태, 이형선 연구위원 02-3786-3852]